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안 진



방학이나 특별한 가족행사가 있는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콩 볶듯 후다닥 일을 해치우고 각자 자신의 거처를 찾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별난 가족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서울, 광주, 경남 등 서너 곳에 흩어져 사는 우리 가족들의 통신비와 주거비, 교통비를 비롯한 일상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우리 부모세대는 혀를 끌끌 한다.

우리 부부는 부모를 돌보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원하는 만큼 자식을 생산한 것도 아니다. 자식을 적게 낳은 필자는 가족계획운동이 한창이던 60년대, 70년대였다면 계획된 부부로 애국자였지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기적인 부모이자 국민의 기본의무도 못하는 사람이 된 셈이다.

우리 가족 디아스포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까닭에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 부모님이 노환으로 입원을 해야 하거나 아직 학업 중인 아이가 심하게 아플 때면 대책이 없다.

간병인을 쓸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자리를 버리고 거처를 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는 경제적

갖지 않으면 어렵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장기에 꿈꾸어온 가족의 이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의 가족은 형태와 기능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가족관계 까지 통째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혼한 부부와 그들에게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는 일상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한 집착은 이제 이상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결혼가치관의 변화로 동거가족이나 싱글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사유로 한 부모 가족도 급

할 도맡아온 여성들이 남성과 등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이상적인 정상가족의 신화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 노동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작년 가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족정책기본법안의 핵심취지이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이조급하게 제정된 2004년의 건강가정 기본법의 근본적인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모조록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현명한 가족정책은 '정상가족'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현실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 노동을 국가가 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개인이 보살핌의 역할은 가족 고유의 일이라거나, 가족 안에서 보살핌 전달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보살핌의 사회적 성격을 공론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가정이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정상 가정’ 고정관념을 깨자

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성장을 위해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내하더라도 사회적 삶의 피로에서 오는 긴장을 관리해주는 정서적 기능을 가족이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성장자의 자녀,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일상적으로 돌보아 주는 일이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얼굴을 보는 부부가 사랑과 신뢰를 유지하는 일, 또 일상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나 노부모가 버려진 채 가족연대를 유지하는 일은 웬만한 정신력을

증하는 추세다.

노부모 부양관도 바뀌어 노인 단독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부양과 같은 보살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의 취업이 보편화되고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보살핌 노동의 공급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변화하는 현실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이 국가의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은 한 단위로서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족의 보살핌 역

## 시 설

## 소쇄원 관리·보호대책 재검토 필요하다

조선시대 민간 정원 가운데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담양 소쇄원(瀟灑園)의 보호·관리가 엄망이라고 한다. 일부 시설이 크게 훼손됐는가 하면 입장료와 주차료를 따로 징수해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소쇄원 관람객들은 주차료를 냈 뒤 또 다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 임의로 매표소를 설치했고 '관리업체'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군과 문중 측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시설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소쇄원 내 각종 시설이 망가지고 붕괴 위험마저 있다. 소쇄원의 관리가 이 정도라면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조상의 유물로 돈으로 환산하려는 물신(物神)주의로 낯뜨겁지만 방지해온 지방문화재 행정에 막힌다.

문화재 보호·관리에서 작은 실수는 민족유산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담양군과 문중 측은 소쇄원은 특정 단체나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 민족의 소중한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문화유산을 사유물화하거나 투자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담양군과 문중 측은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소쇄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둘어야 할 것이다.

## 파업으로 생산차질액 3조원 넘었다니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액이 크게 늘어나 3조324억원에 달하고 수출 차질액도 20억달러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38개 사업장 가운데 생산 및 수출 차질을 빚은 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2005년에 비해 생산 차질액이 135.1%, 수출 차질액은 149% 증가했다고 한다. 안타깝다.

피해가 심각한 곳은 대형 사업장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생산차질액이 전체의 50.0%와 29.3%에 달했고 수출차질액도 54.7%와 32.8%를 차지했다. 특히 두 회사를 포함한 9개 대형사업장이 전체 생산차질액의 98.5%, 수출차질액의 98.8% 수준이었다.

이같은 통계는 노사분규를 겪은 업체들이 자체 출산한 피해액을 합산한 것 이어서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생산 및 수출차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대형 사업장의 정체화이다.

노동계가 불안한 것은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파업은 근로자의 권리의 헌법에 따라야 하고 대상도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국한하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계가 사업주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내걸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계도 사회적 비중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찾은 파업으로 생산과 수출차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는 회사와 노조가 공멸할 수 있다. 최근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 움직임에서 드러나듯 일부 노조에선 조합원들까지 '정치파업'에 부정적이다.

노동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귀족 노조'·'노조 독재'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파업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넓힐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류 재 규



미국의 배우 페리스 힐튼(Paris Hilton)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4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로스앤젤레스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미국 사회는 3천600억원에 달하는 헐턴 호텔의 상속녀이고 유명 배우인 헐턴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내렸지만,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선은 아직도 관대하기만 하다.

국내에서도 몇몇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말썽을 빚었지만, 몇 개월도 채 안돼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인들도 음주운

## 기 고

강 박 원



최근 우리 사회에 주목하는 교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 교사가 강압적인 급식지도를 했다고 항의하는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다. 학부모가 문제학생의 징계를 놓고 충돌을 빚어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학생을 나무라다 폭행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개탄

또, 유통의 성학집요(聖學齋要)에는 '스승은 일로써 가르치고 덕으로 깨우친다고 하였다. 일로써 가르친다 함은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치를 터득하게 한다는 뜻이고, 덕으로 깨우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 덕을 쌓아 모범을 보이고 매사를 덕으로 교화시켜 준다는 뜻이다.

스승은 지숙(智育)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덕을 쌓고 이로써 가르친다. 고전적 의미에서 스승상은 도덕적 수양

## 올바른 스승상 정립하여 교권 회복하자

스승기 그지없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스승관이 무색할 때이다.

교권이 이렇게 심각한 도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 간의 신뢰가 실질화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 못지않게 교사의 금품 및 촌지수수와 성추행, 성적조작 등의 비리도 해마다 수십여 건에 이르고 있다.

스승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세종 때 헌민정을 창제 당시에 월인석보(月印釋譜)와 두시언해(杜詩諺解)에 '스승'이란 용어를 표기했다. 스승은 선비요, 선비는 선인(仙人)이요, 선인은 단군이라 추앙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면서 누군가를 위협하듯 또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나와 내 아이, 내 가족을 위협에 빠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음주운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상책(上策)이다. <변호사>

만 쌓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유통의 성학집요를 탐구해 보면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이 심오함을 재음미하게 된다.

이제 스승의 올바른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의 세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다. 교사들은 혹여 부당한 학습지도방식이 있다면 개선하고, 학부모들은 의사표현의 정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없이 어떻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또한, 정부나 학교당국도 각급 학교에 학부모 전문 상담실을 설치해 자녀와 관련한 모든 상담을 그곳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등 교권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스승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 無 等 鼓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는 당신과 나다."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루스벨트는 명감독 이자 배우인 오션 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패한 배우였지만 레이건은 정치인으로 대성공했다. 미국인들은 큰 키에 시원스런 미소, 절도있는 웃음, 명묘한 대사 전달력을 갖춘 레이건에게 환호했다. 루스벨트가 라디오의 '노년집담'을 통해 국민들을 매혹시켰다면, 레이건은 TV를 통해 정치적 신도를 끌어 모았다.

미국에서 배우 출신 대통령이 또 나올지 모르겠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태네시주 부패스캔들의 수사가 사전에 드러나면서 그가 배우로 전직한 프레드 톰슨 전 상원

의원이 주인공이다. 노웨이아웃에서 CIA국장, '사선에서'의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그가 연기한 인물이다.

톰슨이 공화당의 쟁쟁한 후보를 물리치고 대선 후보 지지를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영화에서 정부 고위직을 섭외했던 그가 대통령까지 오를지 주목거يرة.

/오주승 정치부장 soh@kwangju.co.kr

##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한 때

전을 단순한 '실수'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리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협종중률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500만원 이하 벌금에 서 5년 이하·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은 곤란한 상태에서 주행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 광주일보를 읽고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꼭 확대·보완되길

광주일보 6월 20일자 19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제재된 내용을 읽고 쓴다.

독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 시행의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데 대해 동감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경우 영업장 면적 300m<sup>2</sup>(약 90평)이상의 대규모 식당에서 취급하는 쇠고기와 쌀 품목에 한해서 원산지의 의무표시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광하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업무도 전문기관으로 포괄시켜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됐으면 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와 농업계에서는 음식점 규모 면적을 축소 조정하고 대상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지만 요식업계와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마침 국회 등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확대·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기회에 영업장 면적 100m<sup>2</sup>(약 30평) 이상의 음식점과 이 업소에서 취급하는 쇠고기, 쌀은 물론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의 의무표시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광하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업무도 전문기관으로 포괄시켜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됐으면 한다.

▲안규백·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계장

## 사립유치원 교사